

광주시 “도시철도 침단대교 구간 지하화 불가”

시, 예산·공사기간 연장 문제에 지상화 결정...도심단절·소음 등 우려
강기정 시장, 주민 공청회서 교통체계 개선·교통혼잡 완화방안 등 설명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 2단계사업 중 침단대교 구간에 대해 지상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결론을 냈다.

지상화와 지하화를 두고 오락가락하다, 결국 예산과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함에 따라 지상화로 결정돼 교통혼잡과 소음과 진동, 도심 단절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북구 종합사회복지관 5층에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11공구 건설공사 주민 공청회’가 진행됐다.

이 공청회는 강기정 광주시장이 주민들에게 침단대교 구간 지상화로 인한 교통체계 개선과 교통혼잡 완화방안을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광주시 도시철도 2단계 사업은 당초 어린이 교통공원 앞 교차로(침단대교 구간)와 임방울대로, 광신대교 등 3곳에 대해선 전체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 지상구간으로 설계됐다.

이들 구간을 지하화하면 최소 1500여억원의 추가 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 내에선 이들 구간의 지상화를 놓고 심각한 교통체증 발생과 지상화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 도시철도 운행 과정의 소음, 도심 단절 등 각종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광주시는 지난 2021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 공청회와 의견수렴을 거쳐 어린이교통공원 앞 침단대교 지상화를 제외하고 나머지 구간은 지하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침단대교 인근 주민들은 주민대책위를 마련해 지속적으로 지하화를 요구하고 있어 광주시가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이날 강 시장은 “침단대교 구간을 지하화하려면 막대한 예산도 문제지만 정부 승인도 어렵고 최소 2년 이상 공사가 지연되는 등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민대책위가 제시한 지하차도나 고가차도를 건설 방안에도 난색을 표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통과 교통량만 따지면 대책위의 제안이 매우 유리하지만 본선 도로 용량이 감소하고 주변의 극심한 교통 혼잡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450억원에서 600억원이 필요한 제안이고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막대한 사업비를 조달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침단대교 구간의 지상화로 인해 어린이공원 앞 삼거리 좌회전이 불가능해 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우회거리가 늘어나고 보행로가 끊기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는 가장 문제되는 구간 2곳(추암로~침단2지구, 침단1지구~추암로)에 대한 차선 확장 등 교통 혼잡 개선 방안을 내놔다.

기존 4~5차로로 운영하던 차선을 5~6차로로 늘리면 도로 역량 대비 통행량 효과를 20% 늘릴 수 있고 대기행렬도 261m에서 193m로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우회로(엠코로, 침단 중앙로 182번길)를 확보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보행 전용로 신설, 자전거 이용 환경 개선 등으로 불편을 줄이겠다는 방안도 내놔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지하화를 요구하거나 안전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도시철도 지상화로 기존의 좌회전이 제한돼 출퇴근길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시는 출퇴근길 교통량 분석 등 전문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개선책을 검토한 뒤 주민대표들과 한차례 더 만나 설득을 할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공공기관 여성근로자 남성보다 임금 12.1%↓

광주시 공공기관의 성별 평균 임금차이는 1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 출자·출연 2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도 성별 임금격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성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남성보다 연간 12.1%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는 광주교통공사(29.7%), 광주테크노파크(22.2%) 등에서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상위직급에 남성 인력이 집중된 인사 구조, 큰 복무 경력 인정에 따른 근속 연수 차이, 초과근무수당 지급의 차이 등 복합적 구

조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명시적인 임금차별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20개 공공기관의 전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노동자 2260명 중 여성은 665명으로 전체의 29.4%로 확인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광주지역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23년 더불어민주당 채은지(비례)광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별임금격차 공시 조례’에 따른 것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AI 돌봄 로봇이 독거노인 고립 해소 돕는다

전남도, 100세대에 8월 보급

전남도는 13일 “보건복지부의 ‘AI 반려견 활용 정서건강 원스톱 지원 구축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선정된 이번 사업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해 독거노인을 지원한다.

전남도의 AI 반려견 활용 정서건강 원스톱 지원 구축 사업은 외부 활동이 어려운 고립형 독거노인 100세대에 강아지 형태의 인공지능 돌봄 로봇을 보급,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고립 해소를 돕는 것이 핵심이다.

돌봄 로봇은 어르신에게 말을 걸고 기분을 묻는

등 일상 속 대화 상대로서 정서적 교감을 제공하며, 식사 시간이나 약 복용 시간을 챙겨준다.

특히 응급상황 시 119에 연계해 골든타임 내 위기 대응이 가능하고 보호자는 전용 앱을 통해 어르신의 건강·정서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전남도가 총괄 주관하며, 전남사회서비스원이 실무기관을 담당하다. 돌봄 로봇 제조사인 ㈜효돌과 대상자 선별·관리 역할의 주택관리공단 목포지역단이 협력 파트너로 참여해 현장 중심의 통합 돌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목포 상동 주거행복지원센터에 거주 중인 고립형 독거노인 100명을 대상으로 8월께 본격 보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고려시멘트 건동광산 현장 방문

김영록 전남지사가 12일 장성군 고려시멘트 건동광산 현장을 방문, 광산을 이용한 개발과 관련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전남도 제공〉

여수·광양항서 북극까지...전남도, 글로벌 물류길 뚫는다

‘북극항로 시대’ 정책 세미나...원유·벌크화물 특화 항만 육성 등

전남도가 여수·광양항을 ‘북극항로 시대’의 거점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전남도는 지난 11일 도청 왕인실에서 ‘북극항로 시대, 여수·광양항의 역할과 성장전략’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여수·광양항은 원유와 벌크화물 처리에 특화된 항만으로 북극항로와 산업 구조적 연계성이 높아 다른 항만과 차별화된 역할이 가능하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특히 2023년 기준 북극항로를 운항한 선박 99%가 원유, LNG, 철광석 등 비컨테이너 화물선으로, 여수·광양항은 북극항로와의 산업적 연계성이 높아 물류 거점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췄다는

분석이다.

세미나는 해운항만·산업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초발표와 종합토론을 진행하고, 변화하는 글로벌 물류 환경에서 여수·광양항의 새로운 가능성과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여수·광양항의 북극항로 거점항만 육성 전략으로 ▲원유·벌크화물 중심 북극항로 개척항만 육성 ▲LNG 해상 버커링 특화항만 조성 ▲에너지 자원을 비축·유통하는 수출입 중계 기지와 구축 방안 등이 제시됐다.

지난 2013년 10월 현대글로벌비스가 광양항을 출발해 북극항로를 활용, 러시아 우스트루가항으

로 나프타 4만 3838t을 운송한 것은 여수·광양항이 북극항로 물류 중심지로서의 잠재력을 입증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여수·광양항은 원유, 광물 등 특수화물 운송에 강점을 가진 항만으로, 북극 자원과 연계한 물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앞으로 여수·광양항을 새정부의 북극항로 시대를 이끌 동북아 물류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오는 31일 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 전문가와 함께 ‘제2차 북극항로 정책 세미나’를 열어, 여수·광양항의 북극항로 거점항만 육성 필요성과 정책적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라남도사회복지협의회 2025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시행 공고

2025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the Community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도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the Community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기업과 기관을 발굴하여 그 공로를 지역사회가 인정하는 제도

SSN 전라남도사회복지협의회 SSN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보건복지부

1 시행개요

운영체계	시행기관	운영기관	업무협약 및 후원기관
	보건복지부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지방자치단체 · 시도 사회복지협의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국민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농협중앙회, 법무법인 다영지,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환경보전원, 한국표준협회, IIM금융그룹, 대한경영학회, 농협은행, 중소기업인인증전,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한국인정지원센터,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인정대상	민간기업	대기업(사업장, 지점, 지소 등),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공공기관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공기업, 출자기관, 출연기관)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기타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기타단체 등	

인정기준	심사유형	유형 I	유형 II	유형 III
대상		중앙공공기관(본사) 대기업(본사)	지방공공기관 중견기업 유형 I 의 지사(사업장, 지점 등)	중소기업 사회적경제기업·소기업·소상공인 교육기관·의료기관·기타 단체 등 유형 II 의 지사(사업장, 지점 등)
지표수		19개	19개	19개
합격점수		120/200점	110/200점	100/200점

2 심사개요	지역사회 내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한 실적 사회공헌 활동 인정기간 : 회계연도 기준 2024. 1. 1. ~ 2025. 6. 29.
신청자격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온라인 플랫폼(https://crckorea.kr/csrcommunity) 실시간 신청·접수·결재 가능
신청방법	비영리단체 추천서 1부, 지표별 증빙자료 각 1부.

3 심사일정	시행공고 → 신청접수 → 서류검토 → 전문위원심사 → 지역 및 중앙심의 → 승인공고
	6월 말 7월~8월 14일 8월 9월 10월 11월 25일

4 인센티브	• 인정매·인증증명서 발급 및 인정라벨 사용권한 부여 • 인정기업·기관 보건복지부장관 포상 및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포상 수여 • 인정기업·기관 임직원 자원봉사단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특별상 수여 및 활동재료비 지원 • 인정제 지원 프로그램(교육·포함·시미나·행사) 제공 및 언론홍보 • 인정제 후원기관 우대혜택 제공
문의	전라남도사회복지협의회 061-287-8955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센터 02-2077-3955

업무협약 및 후원 기관 KSBT 신용보증기금 KSBT 기술보증기금 국민연금 KSGM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농협중앙회 DLG Ksure 한국무역보험공사 KSA 한국표준협회 IIM 금융그룹 KBBG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NH농협은행 KOSRE 한국인정지원센터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